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01
----------	------

발의연월일 : 2025. 2. 12.

발 의 자 : 양부남 · 권향엽 · 김문수
김한규 · 김현정 · 이개호
이광희 · 이해식 · 전진숙
정진욱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

서 총체적·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49조제3항 중 “공개”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 ----- ----- ----. <u>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u>공개</u> 하여야 한다.	③ ----- ----- ----- --- <u>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u> -----.
<신 설>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u>
<신 설>	⑤ <u>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p><u><신 설></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⑦ -----제6항----- ----- ----- ----- -----.</p>
---	---